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63
----------	-------

발의연월일 : 2025. 10. 22.

발 의 자 : 정태호 · 이학영 · 복기왕
김주영 · 진성준 · 이주희
이수진 · 김태년 · 한병도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 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음.

최근에도 대·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산·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5(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채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채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채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채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채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년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이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실패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패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

⑥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9조의15(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채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채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u></p> <p><u>1. 채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u></p>

“실퇴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퇴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퇴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퇴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퇴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
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
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
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
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
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이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
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
액

4.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
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
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실패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
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
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
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
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
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
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
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
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
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
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
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
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

6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채납액의 납
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
정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채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채납액에 대하여 납부
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
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채납처분(또는 강제
징수)을 하여야 한다.

⑥ 소멸대상채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